

1950년대 한국사회의 한센인에 대한 학살과 그 시선

1957년 비토리 사건을 중심으로

임덕영(리츠메이칸 대학 첨단종합학술연구과 박사과정)

1. 문제의식

· 2004-5년 진행된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보상소송을 계기로 한센병 환자의 과거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정근식 외, 2005).

· 그러나 한센인에 대한 차별은 단지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 등 “국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특히 1957년 22명의 한센인이 민간인에 의해 학살된 “비토리 사건”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밝혀져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국회의 보고서를 요약하고, 당사자 3명을 인터뷰하여 사건에 대한 일면을 보고하였다.

· 본 연구는 이를 실마리로 하면서도, 한센인에 대한 국가적 수용이 시작된 직후인 1950년대 발생한 ‘비토리’ 사건의 시종을 정리, 이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당시의 신문과 정부 및 인권위가 요약한 보고서의 원본(나환자와 사천군 비토리 주민과의 충돌사건에 관한 조사보고, 이하 조사보고) 등을 참고한다.

2. 시대적 배경

① 강제 수용(이른바 정착촌)의 법제화, 체계화의 “시작”

구분	1950년 이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합계	10	34	43	12	1

참고자료: 「한센인 인권실태조사」 2005. 정근식 외. 국가인권위원회. p. 228

② 거리에서 생활하는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공포 증가. 강제 수용을 요구하는 언론보도 많아짐. 또한 한센인에 의한 잔혹한 범죄 행위의 연속적 보도.

③ 집단 운둔 생활하고자 하는 한센병 환자와 주민 간의 충돌 빈번히 발생.

④ ‘현대적 치료’ 및 ‘개몽’ 활동의 본격화

3. 비포리 사건의 전개과정

(1) 비포리의 상황

· 경상남도 사천군 서포면에 속하며 행정관계의 이름은 비토리이며 섬이름은 비토도이다. 면적은 3.19㎡.

· 사건 당시 호수 123호, 인구 815명. 가경지로서는 31정보의 밭과 41정보의 논이 있었음.

· 주민 대다수는 반농. 반어로 생활을 꾸려갔으며 주요 생계수단은 굴 채취.

· 중앙수산시험장에서 모리(굴) 양식시험장소 선정, 1952년부터 국고보조로 장리를 받고 있는 곳이 있음.

· 약 22정보가 이른바 적산지로 주인이 없었음.

(2) 영북원의 상황

· 1950년 설립된 나병자 수용소. 원장은 기독교 장로 정대성 씨이며 환자 281명.

· 대지 2080평, 임야 10여정보, 담 7000평을 소유하며 농사로 생계 이감.

· 비포리와는 배로 불과 1시간 거리.

(3) 사건의 전개 (일지 참조)

4. 사회적 시선의 교차

(1) 천인공로론: 좌우지간 사람을 죽인 것은 나쁜 일이다.

“이번 참사에서 우선 위주민들의 잔인성이 우리에게 몸서리치게 하는 바 있다. 아무리 나병환자라고는 하더라도 동족인데 추후도 연민의 정도 없는 듯 죽창 곤봉과 돌맹이로써 개돼지 때려잡듯 살육을 자행한다는 것은 우리 상정으로서로는 실로 상상 밖의 노릇이다.”(1957년 9월 4일 경향신문)

(2) 쌍방동정론: 한센인도 주민도 동정할 수 밖에 없다.

“이번 나병환자가 대량으로 집단이주하고 보면 위주민들 자신 그 불치의 병이 감염될 위험에 대한 공포도 물론 있을 바이겠지만, 그보다도 나병감염을 꺼리는 때문에 그 어산들의 판가 분쇄되지 않을까 하는 생활위협감이 이번 참사의 근본동기라고 볼 수 있다.”(1957년 9월 4일 경향신문)

(3) 생존 경쟁론: 자유경쟁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건

“‘로마’가 ‘카르타고’의 침입을 물리친 것은 찬연한 승리사로서 후세에 길이 빛나건만 이 도민들의 경우는 살인이라는 죄목을 쓰고 백일하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생존경쟁”이라는 원칙에서 물리쳤을 따름인데!”(조선일보 1957년 9월 11일)

(4) 국가행정 미비론: 경찰당국과 보건당국의 무대책이 빚어낸 참사

“경찰 당국에서는 왜 사전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치 않았던가? 사건 발생전 몇 시간 전에 주민들을 해산시킨 후에도 경비원을 배치하였어야 하지 않았던가?”(동아일보 1957년 9월 4일)

(5) 무지론: 한센병에 대한 주민들의 무지 때문에 발생

“나병의 현대적 개념은 물론 그 군당국에서는 나병이 치료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며 나병치료약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 나병정책의 실정이다.”(경향신문 1957년 9월 11일)

(6) 음모론: 시설원장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기 위해 나환자를 부추긴 것이다.

“나병환자를 움직이게 한 직접적인 동기는 환자도 아닌 영북원 설립대표자 정봉성 씨의 ‘임야강제점점계획’에 의해 이들 나병 환자들은 정부의 약육에 이용되었다는 점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동아일보 1957년 9월 2일)

>> 자료: 비포리 사건의 전개과정 일지

일시	주요 사건	출처
1950년	· 사설 나병자 수용소 영북원 설립 및 비토섬 이주계획	「조사보고」 p.4
1956년 11월	· 농림부 장관 귀속임야의 임대 방침에 따라 비토리 192 정보 중 22정보 3반을 임차받기 위해 수속	「조사보고」 p.4
1957년 7월	· 12일 수속 접수, 17일 각하 반송	「조사보고」 p.4
8월 7일	· 삼천포 시장, 농업은행 삼천포 지점장, 원장 등 3인이 삼천포 경찰서 방문, 협조 요청. 삼천포 경찰서 서장, 합법 하에서 행동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승락 받음.	「조사보고」 p.4
8월 8일	· 비토도에 환자 36명 입도(영북원 소유 선박)	「조사보고」 p.5 「동아일보」 9월 4일
8월 9일	· 경찰과 도민의 반대로 퇴거	「조사보고」 p.5
8월 16일	· 원장과 총무부장이 서포지서, 삼천포 경찰서에 19일 입도할 것을 예고.	「조사보고」 p.5
8월 22일	· 태풍의 영향으로 당초보다 늦은 22일 입도, 천막설치, 개척 착수.	「조사보고」 p.5
8월 23일	· 약 70여명의 원생들이 섬 입도	「동아일보」 9월 4일
8월 24일	· 서포지서의 출두통지에 따라 원대표 2명이 출두, 서포면장, 부면장, 지서주임 등 차석입회하여 27일 퇴거하겠다는 서약서를 면장에게 제출 · 영북원 측에 따르면 이것은 당시 대표단 중 한명인 총무부장이 개인적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	「조사보고」 pp.5-6 「동아일보」 9월 4일
8월 27일	· 서약서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자 경찰이 주민 12명 차출하여 환자를 집합케 한 후 실탄 3발 공중에 발사하여 위협, 환자 퇴거 거절.	「조사보고」 p.6
8월 28일	· 주민 100여명과 환자 간의 투석전 전개. · 경찰의 해산명령으로 일시 중지. · 오후 1시경 경찰의 부재한 틈을 타 주민 100여명, 짐을 올리며 합성을 올리면서 환자 내습(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후 2시에는 맞서고 있었을 뿐이었으나 사건은 6시 30분 경 발생). 경향신문의 30일자 보도에 의하면 죽사 10명, 중상 21명, 경상 3명 · 오후 10시경 본사에 사태보고 전함.	「조사보고」 p.10 「경향신문」 8월 30일 「동아일보」 9월 4일
8월 29일	· 오전 3시 사건 종결. 6명 검거 취조. · 경상남도 도경찰, 관내 나병환자 집단 수용소 및 집단부락 엄중 경계 시달	「경향신문」 8월 30일 「경향신문」 8월 31일
8월 30일	· 경찰 부락민 67명 검거했다고 밝혀. · 경남도경 사천군 서포지서주임 인척파면 · 사천군에서 민의원 정감주 씨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희택 경남문교사회국장등의 조사 가운데 위령식 거행.	「경향신문」 9월 1일 「경향신문」 9월 2일 「경향신문」 9월 2일
8월 31일	· 사망자 증가하여 22명 사망, 53명 중상, 4명 행방불명.	「경향신문」 8월 31일
9월 1일	· 서울시 경찰국에서 나병환자 수용소에 대한 경비 강화 긴급지시.	「경향신문」 9월 2일
9월 2일	· 보건사회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상남도 도립 나환자 수용소인 상예원을 국립시설로 승격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을 요청.	「조선일보」 9월 3일
9월 3일	· 제26회 정기국회에서 정감주 의원, 민의원에서 나병환자 불상사건 보고.	「경향신문」 9월 4일
9월 3일	· 영북원장, 부산에서 “사회사업연합회” 주최 “나환자 수용소장 회의”에 참석하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8일 오후 2시경 서포지서에서 비상 싸이렌을 울려 동원시켰다고 비난.	「동아일보」 1957년 9월 5일
9월 4일	· 치안국, 사문위원회를 열고 삼천포 경찰서장 면직키로 결의. · 치안국, 경상남도 경찰국에 대해 정세(영북원장)를 충돌사건에서 주도자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 검거하라고 긴급 지시. · 동아일보는 검거 지시의 원인으로 원생들을 이주시키게 한 원인으로 정씨가 이권개입을 했다고 보도.	「동아일보」 9월 6일 「경향신문」 9월 6일
9월 6일	· 치안국, 주민 91명을 살인,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진주 지청에 송청. · 82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송청이고 지명수배중에 있는 7명은 “기소중지의견”	「동아일보」 9월 7일
9월 7일	· 치안국, 영북원 원장 정봉성씨를 전국 경찰에 지명 수배. 체포되.	「경향신문」 9월 7일 「경향신문」 9월 14일
9월 10일	· 전국 5개 국립 나병진료소 및 환자 대표가 모여 관계당국에 12개 조항으로 된 진정서 제출할 것과 환우회를 조직할 것을 결정.	「경향신문」 9월 12일
9월 12일	· 안세균 병리시험소 소장, 오만환을 나환자를 위해 유익하게 써달라고 경향신문에 기탁. · 영북원 원장 정봉성 씨, 구호봉 원령 및 경찰에 대한 명예훼손 죄목으로 부산지검에 송청	「경향신문」 9월 13일 「경향신문」 9월 14일
9월 16일	· 구속된 82명 중 34명 석방, 48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동아일보」 9월 19일
9월 16일-18일	·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 조사 실시	「조사보고」 1p.
10월 21일	·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 보고서 제출.	「경향신문」 10월 22일
12월 23일	· 비토리 소요사건 제1회 공판이 개정. 구속피고인 23명 및 불구속 피고인 20명에 대한 사실 심리.	「경향신문」 12월 26일 「동아일보」 12월 27일
1월 28일	· 부산지방법원, 비토리 나환자 상해치사사건의 연도공판 열려. 5명에게 징역 3년, 6명에게 징역 2년, 32명에게 집행유예 3년 연도.	「경향신문」 1월 31일 「동아일보」 2월 1일

5. 검토

· 본 사건을 통해, 1950년대 ‘일반인’의 ‘한센인’에 대한 공포는 ‘일반적’이었으며, 그 공포는 ‘한센인’을 집단학살하는 ‘광기’로 표출될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여기서 국가는 ‘한센인’에 대한 억압자로 등장하기 보다는, ‘광기’, ‘생존경쟁’에 대한 ‘중재자’ 혹은 ‘심판자’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중재 혹은 심판이란, 약자에 대한 부당한 억압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응징으로 나타난다.
· 계몽적 시각의 도입은 그러한 ‘광기’, 혹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타타르는 역할을 보조적으로 수행하였다.
· 1950년대까지는 국가는 ‘한센인’과 ‘일반인’의 중재자에 불과하였지만, 1960년대 시설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적극적인 격리 정책으로 나아간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각 일지
사회보건위원회, 1957, “나환자와 사천군 비토리 주민과의 충돌사건에 관한 조사보고” 정근식 외, 2005,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